

민주 송영길 “청년에 좌절과 실망 줬다” 조국 사태 사과

수위 높은 사과로 정면돌파 의지 ‘명분없는 조국 죽이기’ 당내 반발 국민의힘 ‘영혼없는 사과’ 비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사과 메시지를 내놓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조국 사태’와 관련해 사과한 데 대해 “영혼 없는 사과”라고 비판했고, 당내 반발도 상당하다.

송 대표는 이날 민심경청 대국민 보고회에서 “좋은 대학 나와 좋은 지위, 인맥으로 서로 인턴 시켜 주고 폼퐁이하듯 스펙 쌓기를 해 주는 것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수많은 청년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는 일이었다”며 사과했다.

송 대표는 “(국민들이) 많이 준 의견이 내로남불과 언행 불일치의 문제였다”, “자기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에 원칙을 지켜왔는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는 등 사과에 있어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했다.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문제와 관련해서도 “두고두고 속죄해도 부족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민심탐방 막판 조 전 장관의 갑작스러운 회고록 출간으로 돌출된 ‘조국 이슈’를 책임지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송 대표는 이날 보고회를 통해 그간 지적받은 문제를 정리해 혁신 및 정책 과제 형식으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대선 준비 모드에 시동을 걸 계획이었다.

지도부 관계자는 “송 대표는 민주당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 대선주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송 대표가 이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면 부담은 다 대선주자에게 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고록 출간을 두고 당내 여론이 쪼개진 상황에서 ‘수위 조절’을 고심한 흔적도 곳곳에 엿보인다.

우선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를 지켜 봐야 한다”며 자녀 입시 문제로 사과 대상을 좁혔다.

또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회고록 내용을 두고도 “일부 언론이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쓰기에 웅단폭격해온 것에 대한

반론 요지서로 이해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당내에서는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이미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 조 전 장관이 충분히 사과했고, 민주당이 나서서 사과할 부분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윤 전 총장이 정치적 야욕을 위해 삼급자를 희생양 삼은 사건”이라고 말했다.

당 강령 지지층 사이에서는 “명분 없는 조국 죽이기”, “송 대표를 탄핵해야 한다”는 등의 강력한 성토가 이어졌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송 대표에게 보낸 항의의 문자를 인증하는 게시물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영혼 없는 사과”라고 비판했

다. 김여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국 사태로 등 떠밀리듯 했던 이해찬 전 대표의 대국민 사과를 제외하고는 지난 4년간 진심이 담긴 사과나 통렬한 반성 한번 없던 정권이었다”며 “송 대표의 사과 역시 영혼이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송 대표가 최근 출간된 조 전 장관의 회고록에 대해 ‘반론 요지서로 이해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 “자기명분과 궤변의 연장선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사과에서 국민에 대한 존중을 찾아 보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국민이 진정성 없는 사과에 귀 기울일 시간도 여유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진정 변화하고 각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일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결과보고회’에서 결과 보고를 하고 있다. 송 대표는 이날 ‘조국 사태’와 관련해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민주 중점과제, 부동산 34%·검찰개혁 19%”

‘민심경청 프로젝트’ 결과 보고

국민의 34%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민주당의 최우선 추진사항으로 꼽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지역위원회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진행한 ‘민심경청 프로젝트’ 설문조사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해당 설문조사에는 당원 2만7774명, 일반 국민 2만4772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으로 응답자의 34%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꼽았다. 이어 ▲검찰·사법개혁(19%) ▲코로나19 백신 확보 및 방역(15%) ▲경제 활성화 12% 순이었다.

윤관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심경청 결과보고회

에서 “20대 연령층에서 중점 추진사항으로 일자리와 고용 창출을 꼽은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에서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꼽은 비율이 다른 지역 대비 10% (포인트) 이상 높았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에서 부동산 정책 중 부족하거나 아쉬웠던 정책을 묻은 질문에는 ▲LH사건 등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25%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혜택 22% ▲과도한 중부세와 양도세 적용 21% ▲과도한 대출 규제 16%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국세-지방세 비율 7대3 가깝게 가야”

지방소비세율 7%포인트 인상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에 근접하게 지방 세수 비중을 올리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현행 21%인 지방 소비세율을 28%로 7%포인트 인상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송영길 대표는 2일 재정분권특위 회의에서 “연방정부 수준의 지방자치를 이루겠다는 목표로 출

발한 문제인 정부인데 지방 재정 분권으로 가는 데 여러 어려움이 있다”며 “특위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법안과 예산 일정을 고려하면 지금이 2단계 재정분권 골든타임”이라며 “지방교부세율을 14.24%에서 최소한 19.91%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광역지자체 간 지방교부세 배부 방식을 개선하고, 지방소비세 일부를 기초자치단체에 직접

주거나 광역단체가 기초단체에 주는 조정교부금 비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위는 이날 말까지 2단계 재정분권 세부 방안을 결론짓고 당론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영배 특위 위원장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 문제에서 7대3에 가까운 결론을 내야 할 시점”이라며 “늦어도 6월 말까지는 당론으로 정리해 당론 입법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석열 소수정에 대선준비 참모팀 뜬다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권 레이스 출정을 앞두고 조만간 소규모 참모 조직을 가동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광화문이나 여의도 등 특정 지역의 캠프사무실을 운영하는 개념보다는 소수정에 참모진을 갖추고 대선행보를 뒷받침하는데 초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총장 측 관계자는 2일 통화에서 “대대적으로 캠프를 차리기보다 5명 이내, 아무리 많아 봐야 10명 정도로 팀을 꾸리는 것이 현재 검토하는 안”이라고 전했다.

윤 전 총장의 직할 대선준비팀은 일단 수행, 공보, 정부, 정책 등 정치 조직외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배대’로만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그동안 윤 전 총장 처가 관련 의혹을 방

어했던 법률 대리인들이 변호사로서 본업을 유지하는 동시에 네거티브 대응팀으로 합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 전 총장은 최근 지인들에게 “진짜 정치는 질문을 받을 때부터”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개인인 가족 신상에 대한 혹독한 검증 칼날은 물론이고,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평가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이 소수정에 코어 조직과 별도로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십 명 규모의 조언 그룹을 두고 정책·공약을 준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인 윤석열의 등장 시점은 오는 11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에 당장 합류하지는 않더라도 정권 교체에 당과 연계해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궁극적으로는 윤 전 총장 본인이 ‘기호 2번’으로 대선에 출마하는 시나리오다.

/연합뉴스



서삼석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조속처리”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 무안 신안) 국회의원은 2일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을 환영한다”면서 “보다 종합적이고 강화된 지원대책이 담긴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1일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한 균특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공포되었으며 후속조치로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9일부터 시행된다”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고령인구와 생산인구 등을 고려하여 행안부 장관이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교통시설, 상수도 시설등의 설치·보수 ▲학교, 도서관유치 지원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 확충 등의 지원사업을 담고 있다. 이를 근거로 수립된 지역별 발전계획은 5년단위 국가균형발

전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된다.

하지만 균형발전과 인구소멸 위기지역 대응은 다른 문제인 만큼 기존 국가균형발전계획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는데는 체계성에도 한계가 있다. 일례로 균특법은 산업부 소관 법률인 반면 인구소멸 문제 대응은 행안부 소관업무이다. 이에 균특법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되어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21대 국회 자신의 1호법안으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안과 노인행복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토지, 건물, 정원수(아파트용) 매매

1. 토지와 아파트용 정원수 포함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전 9,190㎡
소나무 15년생 외 7종 2천여주 아파트 조경수 포함, 광주 간 25분 신설 4차선 국도 근접.
전원주택, 펜션, 다목적 사용가, 포장도로 접 ㎡ 7만원

2. 상가건물

- (1) 광주 북. 오치 4층 대 384㎡ 연 998㎡ 사거리 코너 요지 매 16억8천만원 보 2억, 월 6백6십만원
- (2) 광주 동. 충장로5가 상업지역 도매상 주동로 5층 승강기 유, 대 222㎡ 연 956㎡ 보 8천만원 월 4백만원 가, 매 13억원 전면 18m 접
- (3) 광주 동. 대인동시장 야시장 주동로 코너 점포 8간, 대 238㎡ 연 257.8㎡ 주변 아파트 9천여세대 건축 중, 투자 효과 최상 매 9억9천 보 1천6백 월 2백만원, 상업지역
- (4) 광주 북. 문흥동 3층 상가 대 660㎡ 연 2,000㎡ 상업지역 1층점포 10간 매 51억원 (보 5억5천만원 월 2천2백만원 포함)

3. 전원주택, 가든, 카페 등 용지

- (1) 순창 금과 고례리 광주간 25분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대지 1,163㎡(담 포함) 건물 66㎡ 벽돌조 스라브층, 수리사용가, 산아래 마을 뒷 야마산 바라본 정남 매9천9백만원
- (2)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0분 메타가로수길 약 70m 접, 계획관리지역 전 4,363㎡ (담 포함), 덕진산자락 정남 경관수려 ㎡ 13만원
- (3) 화순 북면 옥리 금호은천 입구 도로접 계획관리지역, 전 531㎡ 매 ㎡ 18만원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장중기 ☎ 010-3635-793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성출플러스 김건너면 통광주빌딩 내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24시간 상담가능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